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담당
발 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문의 : 김동규 사무처장 010-3940-2012, 김주호
사무국장 min@pspd.org 010-4706-7097)
제 목 [보도자료]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날 짜 2018. 07. 23. (불임포함 총 7쪽)

보 도 자 료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 문제 해결 요구에도 본사, 카드사 등은 묵묵부답
국회 법안 처리도 지지부진, 정부 정책은 찔끔, 그 사이 을-병 갈등만 부각
재차 가맹본사, 카드사에 협상요구 및 중소기업지원 법안·정책 촉구 나설 것
**일시 장소 : 2018. 07.23 (월) 오후 2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0 2층 카페봄봄)**

1.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청년, 비정규노동자, 중소기업, 자영업자,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오늘(7/23)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을과 병’의 싸움으로
끌고가려는 일부 언론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태도를 비판하며, 대기업·본사, 카드사,
임대인이 무작정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물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외면해온 국회, 집권 후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상황이 닥치면 마지못해 찔끔찔끔 정책을 내놓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국회에는 즉각 중소기업들이 요구해온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거래공정화 법안을 처리할 것, 정부에는
중소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대책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갑을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여는 말을 맡은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모든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또 다른 ‘을’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과 본사, 카드사, 임대인 등이 함께 분담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본질적인 구조, 갑과 을 사이에 존재하는 갑질 불공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하도급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그동안 하청업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통해 이익을 누려온 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발언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라는 ‘가카임 캠페인’을 펼쳐왔다.”며,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지만 정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며 조성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률이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사회보험료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금액과 지급기간은 확대, 조건은 완화해야 하고 이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상인 자영업자 문제의 핵심은 유통재벌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변종SSM 등을 통한 중소기업 죽이기”라며 “유통재벌들은 지금 당장 복합쇼핑몰과 변종 SSM 등의 추가 출점을 중단하고 지역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4.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인건비, 임대료 못지 않게 부담되는 것이 바로 카드수수료”라며, “금융위원회가 최근 뱅 수수료율을 정률제로 전환하여 소액다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내리고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최고구간을 2.5%에서 2.3%로 낮추었지만 대기업 가맹점 등에 비하면 여전히 2배 가까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포인트 등 마케팅 비용까지 더하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의 실질 수수료율은 0.73%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카드사에 수수료 협상요구서를 보내고 금융위원회에 차별적 수수료율 취급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두 곳 모두 묵묵부답이었다.”며 카드사와 금융위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카드사와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이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는만큼 카드수수료도 1% 이하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다시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편의점 등 가맹·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점주들의 수익은 줄어들어도 본사의 영업이익은 상승하는 과다출점 문제, 과도한 필수물품 강요, 심야영업 강요, 높은 위약금, 막대한 가맹비, 통신사가 제공하는 할인혜택을 마케팅 주체인 통신사가 아닌 가맹점주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 등 최저임금 이면에 숨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진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가맹 분야 등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며 정보공개 강화, 점주단체 신고제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지만 여전히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제고, 광역지자체와의 조사권 및 처분권 조정 등 적극적인 행정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3월 김상조 위원장과 19개 가맹본부 대표들이 발표한 상생협력 방안도 점주들에게 체감있게 이행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국회도 지난 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가맹사업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점주들이 요구한 거래조건 협의를 본사가 특별한 이유 거부 시 제재수단 도입,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6. 신규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낮은 최저임금을 통해 이익을 누리왔던 대기업, 가맹본사, 카드사, 임대인 등에게 다시 한번 상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납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동결 및 임차인 보호 등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하루 빨리 상가법, 카드수수료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중소상인-민생 살리기 법안을 처리하고,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세제 지원 등 추가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규철 위원장은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26일(목)에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맹본사에 요구하고 다음 달 2일(목)에는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차별적 카드수수료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이후 활동계획을 밝히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정부에도 면담을 요청하여 중소상인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중소기업·자영업자단체 및 경제민주화넷 이후 활동계획

▣ 첨부자료3. 중소기업·자영업자단체 및 경제민주화넷 요구사항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 일시 : 2018년 7월 23일(월) 오후 2시
- 장소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0 2층 카페봄봄)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주요 요구사항
 - 국회는 상가법·카드수수료법(여신법)·가맹사업법 등 민생입법을 즉각 처리하라!
 -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추가대책 마련하라!
 - 대기업·본사는 하청·협력업체·대리점 등의 거래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하라!
 - 프랜차이즈 본사는 필수물품 축소하고 가맹금 인하하라!
 -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낮추고 대형 가맹점과의 차별 철폐하라!
 - 상가임대인들도 임대료 조정 등 상생에 나서라!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 발언1 :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 발언2 :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 발언3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이후 활동계획 및 주요요구사항 발표 : 신규철 경제민주화넷 공동운영위원장
 -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 첨부자료2. 중소기업·자영업자단체 및 경제민주화넷 이후 활동계획

- 각종 언론기고 및 언론기획, 인터뷰 등 가카임 이슈 확산 계속
- 7/23(월) 오후 2시, 한상총련 사무실,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중소기업 살리기 입법-정책을 촉구하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카임캠페인단) 기자회견

- 7/26(목) 오전11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필수물품 축소 가맹비 인하를 위한 집단교섭 촉구 기자회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카임캠페인단)
- 8/2(목) 오후 1시, 카드사 또는 여신협회 앞,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인하 및 대형가맹점과의 차별 철폐 촉구
- 8월 초(8/06-8/17), 경제민주화-민생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의당 등 순차적으로 입법 간담회 진행

▣ 첨부자료3.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및 경제민주화넷 요구사항

● 국회

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확대(권리금 회수 기간, 보호 예외사유 구체화 등)
- 철거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 이하로 제한
- 환산보증금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 카드수수료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카드수수료 1% 상한제 도입
-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중소상인 등에게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
-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 요건 완화 및 단체교섭권 부여

3. 가맹사업법 개정

-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강화
-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해지 요건 명시 및 과도한 위약금 금지

4. 대리점법 개정

- 밀어내기 등 불법행위 요건 구체화
- 대리점주들의 단체구성권 및 교섭권 보장
- 계약갱신 요구기간 신설
- 대리점법 적용예외 대상의 축소 또는 폐지
- 대리점주의 계약 해지 요건 명시 및 과도한 위약금 금지
- 대리점 영업지역 보호 강화

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지역상권의 보호 위해 복합쇼핑몰 입점규제를 도시계획단계부터 시행
-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경우 허가제 도입
- 변종 SSM,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에 의무휴업일 지정
- 유통산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참여 보장

6.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광역지자체와 조사권 및 처분권 분담
- 심의절차종료제도 폐지
- 일반 국민이 참여·판단하는 조사심의 심사위원회 도입
- 무형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

● 정부

1.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범위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인상
-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범위 확대(대상근로자 수, 월평균보수)
-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확대(현행 3년에서 5년 이상)
-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확대

2. 카드수수료 인하 및 차별취급 금지, 대체결제수단 확대

- 우대수수료율 구간 확대(장기적으로 법개정 통해 1%상한 도입)
-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차별적 수수료 취급에 대한 조사, 처분

- 카드수수료가 사실상 없거나 낮은 대체결제수단 확대

3.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공정위 행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및 조사의 투명성 확대
-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및 처분권 분담
- 검찰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행정

4.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컨설팅 등 강화

- 가맹대리점주 단체 및 구매협동조합 지원 확대
- 창업단계부터 폐업까지 중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컨설팅 강화

● 대기업, 본사, 카드사, 임대인

1. 대기업, 대형유통기업, 통신사

- 물품대금 등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 복합쇼핑몰 및 변종 **SSM** 등 골목상권 침탈 중단
- 지역상인들과의 상생협약 체결
- 자체적인 의무휴업 확대 및 영업시간 단축
- 통신사의 각종 마케팅 및 할인비용 통신사가 부담

2.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 가맹점주단체의 카드수수료 협상 수용
-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차별적 수수료 적용 해결
-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인하

3. 가맹본사 및 프랜차이즈산업협회

- 가맹점주단체에 대한 와해시도 중단 및 상생협약 체결
- 과도한 필수물품 축소, 가맹비 인하
- 과다출점 문제, 심야영업 강요, 높은 위약금 등 문제 해결

4. 상가임대인

- 공공기관부터 임대료 동결 및 임차인 보호 확대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향후 **3-4**년간 임대료 동결 또는 인상 자제
- 상가임차인과의 상생협약 체결